

용산미군기지를
시민생태공원으로!

龍山區

2000. 4. 23부터



용산 미군기지를
시민생태공원으로 !!

2000. 4. 23.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9-29 KAFI 2층
전화 773-7707 팩스 777-0636 메일 acc21@chollian.net 홈페이지 www.cncr.or.kr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용산 미군기지를
시민생태공원으로 !!**

2000. 4. 23.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9-29 KAFAI 2층
전화 773-7707 팩스 777-0636 메일 acc21@chollian.net 홈페이지 www.cncr.or.kr

용산 미군기지를 시민생태공원으로 !!

30년간의 난개발을 통해 거대한 시멘트 숲으로 변해 버린 서울. 지금 서울은 매연에 찌들고 쓰레기에 뒤덮인 채 시나브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겠노라던 패티 김의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다시금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100만평에 이르는 용산 미군기지를 '시민생태공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한 때 용산은 서울의 외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용산은 서울의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의 대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들을 치룬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용산은 서울을 대표하는 곳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북한산에서 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대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루빨리 100만평에 이르는 용산 미군기지를 '시민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남산공원의 1.2배, 서울대공원의 3배, 어린이공원의 6배, 서울 고궁을 다 합친 것이나 여의도 전체보다도 더 넓습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는 뉴욕의 자랑인 센트럴 파크에 버금가고, 런던의 자랑인 하이트파크의 24배에 이르는 넓은 땅입니다. 이 땅에 '시민생태공원'을 만들게 된다면,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 산 미군기지를 시민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운동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문화연대**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문화연대**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를 꾸려서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기 위한 실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8월까지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문화연대**로 연락 주십시오. **문화연대**의 회원으로 이 역사적 운동의 활동가이자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2000. 4. 23.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응 산 미군기지를 시민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문화연대**는 지난 1월부터 전문가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를 꾸려서 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운동본부는 늦어도 8월까지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문화연대**로 연락 주십시오.

문화연대의 회원으로 이 역사적 운동의 활동가이자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살맛나는 문화세상,

행복한 문화사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문화연대는 문화부분 최초의 시민운동단체입니다.

문화연대는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민주주의'를 주창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민주주의입니다.

문화연대의 소중한 한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일반회원 : 연 36,000원 / 후원회원 : 연 100,000원

은행계좌 : 국민 352-25-0003-021 한빛 790-265223-01-001

/ 예금주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살고싶은 서울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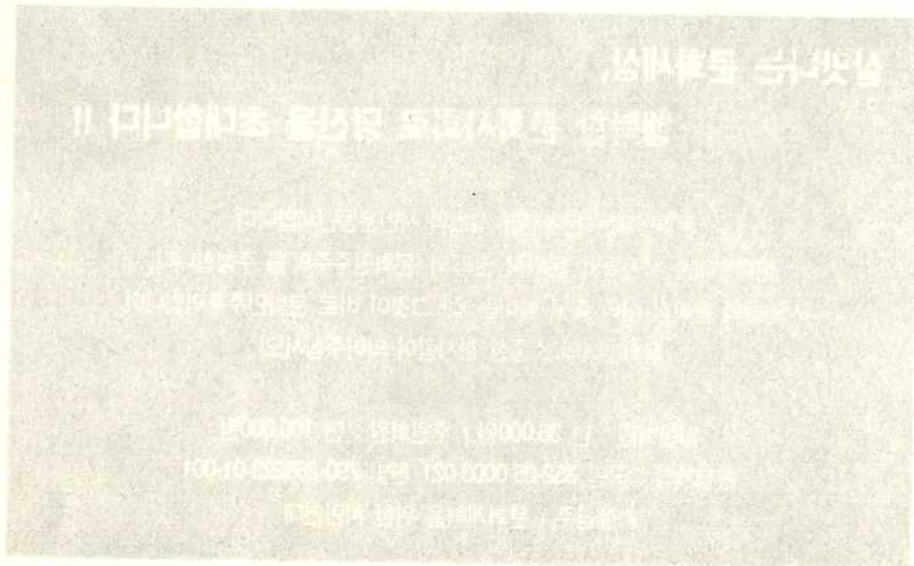
홍성태 /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 · 서울대 강사

주한미군 문제는 더 이상 안보와 관련된 정치군사적 사안만으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주한미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민의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수 있으며, 한·미간의 참된 우호관계가 정립될 수 있겠는가? 서울의 생태적·문화적 재편계획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계획에서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용산기지 반환과 서울 '센트럴 파크' 조성계획, 세종로 미 대사관 반환과 국립미술관 이전계획의 두 가지이다.

1. 서울 '센트럴 파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서울은 시멘트 숲만이 무성한 삭막하기 짝이 없는 전쟁터라고 말한다. 가로수를 잘 가꿔 '거리의 숲'을 조성하거나 건물의 옥상 공간을 녹지로 다듬는 사업이 절실하다. 그러나 더욱 절실한 것은 북한산에서 남산과 한강을 거쳐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복원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돌려 받아 대규모 자연생태공원으로 바꾸어 놓는 작업이다. 무려 1백만평에 이르는 이 땅을 돌려 받는다면 우리도 서울에 센트럴 파크나 상제리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 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자리잡고 있는 예로는 주한미군 용산기지가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다. 이 점에서 주한미군 용산기지는 세계적이지만,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세계적 사례이다. 어떻게 수도 한복판의 1백만 평에 이르는 땅에 외국군 대부대가 수십 년간 땅값 한 푼 내지 않고 주둔할 수 있단 말인가? 용산은 과거에 서울의 주변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시청 이전부지로 거론될 정도로 서울의 한복판 지역이 되었다. 지도를 펴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 말 그대로 한복판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곳에 대규모 군사기지가 자리잡고 있다



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용산기지는 주권의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반환되어야만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좁은 땅에서 9십개의 기지, 8천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 태백산조차 그들에게는 한낱 산악전용 폭격 연습장일 뿐이다. 주한미군은 안보를 빌미로 우리의 주권을 희롱하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자연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저 옛날 명나라 군대가 보였던 것보다 더 큰 무지와 오만과 횡포를 주한미군은 매일같이 저지르고 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둘러싼 한·미 간의 대립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미군측의 억지 때문에 서울의 합리적 개발이 방해받고 급기야 시민의 쾌적한 삶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1980년대 초에 동작대교에서 길이 뻗어나가는 것에 반대하여 이 다리를 기형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다시 1996년에 기지를 반환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곳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의 실현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용산은 사실상 외국군의 차지였다. 이 때문에 용산은 '서울 속의 기지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자연생태공원화는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2. 세종로 '역사·문화지구'를 위하여

경복궁 복원은 거대한 역사·문화적 사업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종로의 '역사·문화지구'화로 발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시체를 박제로 만들어 전시하는 데 그치고 말 것이다. 그것조차 아쉽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역시 시체는 시체일 뿐이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는 이 사업이 그저 박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복원된 경복궁을 중심으로 세종로를 '역사·문화지구'로 만드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예전에 세종로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거리였다. 정부종합청사, 총독부, 청와대,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모두 이 거리에 몰려 있었다. 세종로는 바로 이 권력기관들을 상징하는 거리였다. 그러나 본래 세종로는 서울 정도 6백년을 상징하는 거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조선왕조의 정궁을 옛날의 문화재로 지키고 아끼게 된 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거리여야 한다. 이곳이 이러한 본래의 의미를 회복

할 때, 서울은 시민들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세계인들의 가슴에 유서 깊고 아름다운 도시로 남게 될 것이다.

세종로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의 세종로 미 대사관과 그 관사가 모두 하루빨리 반환되어야 한다. 미국 측의 이기적이고 오만불손한 억지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과거에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정권의 뒤를 봐준 대가로 확보한 초법적 지위를 미국이 여전히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시대착오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살고 싶은 서울 만들기'를 방해하려 해서는 안된다.

미 대사관과 관사가 반환되면 이곳에 현재 과천의 산 속에 처박혀 있는 국립미술관을 이전시키자. 국립미술관을 산 속에 '안치'해 놓은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다. 적어도 국립미술관이라면 국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며 미술 작품을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마당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과천 미술관은 고작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나 애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곳은 차라리 호텔로 재개발하면 훨씬 수익성이 높을 것 같다. 호텔 이름은 '동물원 옆 미술관'으로 해서, 국립미술관이 세종로에 자리잡게 되면, 경복궁에서 뻗어 나오는 길 양편에 세종문화회관과 국립미술관이 자리잡는 형세가 된다. 이와 함께 광화문 앞길을 보행광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이 지역 전체가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문화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과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지가 모두 공유지라는 점에서 현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치의 면에서 '살고 싶은 서울 만들기'의 핵심을 차지한다.

이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대가 필요하리라. 건축가들은 이 과제가 실현되었을 때의 모습을 멋지게 그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자. 그리하여 사람들마다 지금과는 다른 서울을 꿈꾸고 바라게 하자. 주한미군 범죄의 근절과 공여지의 반환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운동단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미국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자. 미 대사관이나 용산기지를 시민들의 대열로 포위하는 퍼포먼스성 시위를 할 수도 있겠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마다 용산기지 앞에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다. 우리 모두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개마

서원, 1999)를 읽고 이런 상황을 잘 알아두도록 하자.

또한 지금까지 미국의 행태와 정부의 대응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의 저항만으로는 이 과제를 달성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과제를 세계 NGO가 연대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자. 미국의 NGO들에게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어떻게 패악집단으로 구실하고 있는지, 미국측이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토와 도시개발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지 알리도록 하자. 나아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 예컨대 베를린이나 오키나와의 비슷한 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하여 미국이 우리를 해치거나 이용하려 온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도우러 왔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만들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두 가지 과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이 거대한 격투장으로 전락하느냐, 생태·문화도시로 다시 태어나느냐의 문제를 가름하는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

시민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한 3가지 원칙

생태성의 원칙 새로운 '시민생태공원'은 북한산에서 남산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 생태축을 복원하는 자연공원여야 합니다.

문화성의 원칙 새로운 '시민생태공원'은 우리의 문화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국립박물관과 어우러진 자연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성의 원칙 새로운 '시민생태공원'은 서울을 '아름다운 도시', '평화의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그 활용방안

조명래 /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위원장 · 단국대 교수

1. 문제제기: 자주성의 상실과 불구의 도시구조

현재 전국에 산재된 미군의 기지 수는 100여 개에 달하며, 그 전체 면적은 1억 여 평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반에 해당한다. 미군기지는 1967년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의 제 2조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라는 규정에 의해 무상으로 공여받아 사용되고 있다. 1993년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를 유료화하면 그 금액이 연 24억 달러(약 1조 9천억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한국정부가 미군의 주둔을 위해 부동산 가격으로 연 2조원을 부담한다는 뜻이 된다.¹⁾

미군의 주둔은 사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방상의 안보란 가치를 창출해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주권의 제약과 국방의 종속성'이란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실이다. 국력이 약하여 우방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피했던 시절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자주국방을 감당할 수 있는 지금에서는 미군의 주둔과 그에 따른 문제들은 주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이면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비판되어야 할 대상이지 숨겨놓을 대상은 결코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화 시대 이같은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위정자의 몫이 아니라 주인된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²⁾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우리는 특히 용산기지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용산기지는 외세, 특히 외국의 군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때 마다 장악되었던 치욕의 장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기지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공

1. 미국은 미군기지 무상사용에 더해 한국정부에 대해 방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1996년 한해에 분담했던 규모는 총 33억 달러(약 2조 6천 억원)에 달했다.
2. 군사독재하에서 미군주둔과 기지의 문제 등에 관한 논의는 금기시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의구조는 이제 탈이데올로기화, 탈신비화, 개방화하여 미군주둔의 문제까지도 주권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어야 한다.

간적 출발점이 되어야할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세계적인 패권국인 미국의 영향이 뻗어오면서부터, 미군 사령부가 있는 서울의 용산기지는 군사독재에 기반한 국내 권력지형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까지 기능하였다. 그런 점에서 용산기지의 합리적 반환과 주체적 이용은 미국과 주권 및 자주권에 관한 협상을 벌이는 중요한 출발 지점이 될 수 있다.

용산기지의 반환문제는 역사, 국제정치, 국방상의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울이란 수도를 합리적으로 경영하는 데도 더없이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용산기지의 면적은 약 105만평에 달하며, 용산구 전체 면적의 15.9%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위치를 놓고 보게 된다면 용산기지는 북악산-남산-관악산을 잇는 지축과 한강의 수축이 교차하는 중심점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그 입지적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 다시 말해, 용산기지는 서울 도시권 내의 사통팔방 흐름을 조절하는 공간적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의 중심부가 남의 손에 있다는 것은 민족 자주시대에 와서도 수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이 여전히 '외세'의 영향을 받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용산구의 입장에서 볼 때 용산기지는 구 전체를 동서로 갈라놓아 21세기를 지향하는 이 지역의 발전상을 주체적으로 그릴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용산기지를 서울 대도시 발전의 주체적 조건과 역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보다 큰 시각에서는 민족적 자주권을 회복하면서 미래지향적 사회를 건설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에 왔다.

2. 용산기지의 역사 : 오욕의 역사

용산은 요충지에 위치한 까닭으로 일찍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³⁾ 외적이 한강으로 통해 용산에 상륙한 뒤 남산과 북악산을 점령하면 서울의 함락이 쉽게 이루질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용산의 둔지산 일대(특히, 미군부대 경내에 있는 용산 4동)에는 둔병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리고 용산 강변에는 군량미를 보관하는 군사감이란 창고도 있었다.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 때문에, 나라가 외세에 의해 짓밟힐 때마다 용산일

3. 아래 나오는 내용들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1996년에 펴낸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에서 주로 발췌된 것임을 밝힌다.

대는 여김없이 주요한 주둔지가 되곤 하였다. 700여 년 전 고려를 침략한 몽고군은 용산을 병참기지로 사용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평양전투에서 패한 왜군 고니시 병력이 지금의 원효로 4가에, 그리고 가토 병력이 청파동 일대에 각각 주둔한 바 있었다. 1892년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 오장경이 이끌던 3천 여명의 병력이 주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84년 청일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의 오시마 육군소장이 지휘하던 약 6천 여명의 군대가 효창동 일대에 머물었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은 용산과 남대문 일원에 수만 명이 주둔할 수 있는 병영을 세웠다. 이어 한일의정서를 내세워 일본은 용산에 3백만평의 토지를 군용지로 강제 수용하였다. 용산이 현재와 같은 외국군대의 주둔지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이다. 일본은 용산 일대의 집과 전답, 분묘 등 총 3백 만평을 21만 5천 원의 헐값으로 강제 수용하기 위해 헌병대의 무력을 동원하였다.⁴⁾ 그러나 매입 후 군사 시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약 1백15만평 정도만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나머지 땅을 일본상인에 팔거나 한국정부에게 되돌려 주었다.⁵⁾ 오늘날 용산기지 면적이 1백만평 남짓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다.⁶⁾ 이렇게 해서 일본은 용산에 조선주둔일본군사령부와 조선총독부 관저, 그리고 20사단 사령부를 세웠으며, 그 후 약 2만 명의 병력을 내내 이곳에 주둔시켰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9월에 미 육군 제 24사단이 서울에 진주하면서 일본의 조선국사령부와 20사단이 사용하던 병영일체를 접수하였다. 에치슨 선언에 따라 미군은 6.25 전에 일시 철수하였으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다시 들어 왔다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20여일 후에 용산을 다시 사용하였다. 이 때부터 미군은 한국군의 작전지

4. 1901년 한달 1인 하숙비가 25원내외였다.

5. 1882년 임오군란 때에 청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였다가, 이태 뒤에 일본군의 손으로 넘어 갔다. 1896년 러-일각서로 한국에 주둔군을 둘 발미를 갖춘 일본은 필동 2가 남별영에 근거를 두었다가, 1903년 러일전쟁시 용산역과 남대문역 앞에 바락막사를 지어 증원군을 수용하지만, 1905년 아예 이 지역의 땅 300만평을 강제 수용해 1908년에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완성하였다. 사유지전 3,118일경(日耕: 하루갈이), 가옥 1176호, 분묘 1,117,308기가 있던 자리 115만평에 한국주둔군 사령부, 총독부 관저, 사령관저, 위술병원, 육군형무소, 포사격장을 세우고, 51만평은 용산철도용지로 쓴 다음, 한강로와 군기지 사이 나머지 땅은 일본 조달업자 등에게 할양했다(강홍빈, 1998, p.208).

6. 이 정도의 규모는 남산공원의 1.2배, 서울대공원의 세배, 어린이 공원의 여섯배, 서울 고궁을 다 합친 것보다도, 여의도보다도 더 넓으며, 샌프란시스코의 골든 게이트 공원보다는 작지만,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버금가고, 영국의 하이드 파크의 2.4배가 된다.

회권도 함께 갖게 되는 데, 용산은 그러한 미군의 사령부(1957년 창설)가 자리잡은 곳이 되었다. 1978년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이곳에 세워지면서, 용산기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통제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거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3. 용산기지의 좌절된 이전추진

용산은 이렇듯 근현대사의 치욕을 온전히 담고 있는 장소로서 의미가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일기 시작한 것은 군사독재에 대한 투쟁이 고조되면서부터이고, 이와 더불어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미군주둔에 대한 재협정을 요구하는 주장도 점차 거세게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에 용산기지 사용에 관한 협상이 1988년부터 전개되면서, 1989년에 가서는 미국측이 '모든 군사 시설을 오는 1996년까지 이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990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간에 '(용산기지)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1990년에 국방부는 기지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용산사업단'을 발족시켜, 미국 측과 실무에 관한 접촉을 본격화시켰다. 미국 측은 용산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춘 새기지를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해 미 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이나 평택 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해 이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내었다. 그래서 국방부는 1991년에 평택군 서탄면과 고덕면 일대 부지 26만8천평 구입계획을 고시하기까지 이르렀다.

한편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을 1단계(90-92년), 2단계

7. 이 합의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전 대상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미 8군 사령부 및 한미연합사 등 주요 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서울 북부지역 미군 부대의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용산의 사우스포스트 일부지역에 잔류하게 한다.
- ② 기지 이전은 96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되, 앞으로 주한 미군사령부의 규모 변화에 따라 일정 및 규모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 ③ 이전 장소는 앞으로 연합작전 체제의 효율성을 포함,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정확한 장소는 한미간 협의를 거쳐 최종결정한다.
- ④ 이전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미국측은 토지 소요를 최소화하고 건물통합화 등을 추진해 비용 최소화에 적극 노력한다.
- ⑤ 용산 미 8군 골프장은 현 남성대 지역에 건설 중인 대체 골프장을 미국측이 인수한 후 91년 3월에 폐쇄하고 용산 골프장 내의 시설은 제거, 이전한 뒤 국방부 측에 반환한다.

(93-95년), 3단계(96-99년)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은 당초의 이전 비용 예상액 17억달러(약 1조8천억원)를 95억달러(7조2천억원)으로 무려 6배나 증액하여 제시하는 바람에 이전문제는 전면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전 예정지였던 평택 주민들의 반대 운동도 거세게 전개되면서 추진사업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1993년에는 북한이 핵확산금지 조약로부터 탈퇴함에 따라 미군 2단계 철수는 전면 보류되면서 용산기지 이전 전반이 불확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3년에 평택의 26만평 이전부지 매입계획을 철회하기로 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후 현재까지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로 계속되면서 '2000년대 이전론', '차세대 이전론'만이 무성히 나돌고 있을 뿐이다.

4. 용산 군이적지에 관한 관주도적 활용계획

1988년 서울시는 용산기지가 이전되면 이곳에 '우리 역사를 되새기는 공간을 만들겠다'면서 이전 적지(跡地)에 민족공원을 조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어 1990년 한미간 체결된 합의각서의 이행으로 1991년에 미 8군 골프장 부지를 반환받아 '용산가족공원'을 꾸렸다. 용산공원 조성은 용산기지 공영화 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본래는 미군 측에서 12만평으로 돌려주기로 하여, 그에 맞는 설계안 공모를 하였다. 그러나 미군 측이 주변 헬기장, 오수처리장, 주한 미군 방송 안테나 등이 있는 3만평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3만평이 준 9만평 부지에서만 공원이 조성되었다.

1991년 서울시가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적지 활용방안과 기본계획'에 제시된 본래의 공원조성은 기지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원조성사업에 앞서 실시한 용산 군이적지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공원을 지지하였다. 공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70.1%가 '휴식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꾸미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린공원 중에서도 특히 모든 계층이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광역 기능적 근린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이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시 보고서는 용산기지 이전적지를 민족공원으로 성격 규정하여 조성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조성 및 계획이념을 선정하기 전에 계획 전제로서 우선 3가지를 설정하였다. '외국군 주둔지의 반환에 따른 도시공간의 합리적 조성', '범시민(국민)의 자유공간의

조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화합의 장소성'을 제시하는 것을 계획의 전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은 '자주(대외적)', '민주(대내적)', '통일'의 이념과 의지를 공원의 공간구성과 이용자의 체험을 통해 구현해내고자 하는 주제공원의 성격을 상정하였다.

용산민족공원의 조성이념과 계획과제

계획전제	주제이념	환경의 질	계획과제
외국군 주둔지의 반환에 따른 도시 공간의 합리적 조성	자주	한국성	문화적 전통의 전승(전쟁기념관/민족공원) 미래지향성의 구현(세계공원/과학공원)
범시민(국민)의 자유공간 조성	민주	개방성	물리적/심리적 개방(근린공원 조성) 자유활동수용(가로공원 조성) 자유질서유지(가족공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의 화합의 장소성	통일	화합성	남과 북의 만남(팔도공원) 화합과 단결의 표현(체육공원)

출처 : 서울특별시, 1991, 「용산 군이적지 활용방안과 기본계획」

한편, 주제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용산공원은 총 17개의 소주제를 가진 소공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안되었다. 17개 주제공원에는 근린공원 19.6%(전체 공원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 가족공원 11.4%, 가로공원 2.2%, 중앙광장 1.0%, 전쟁기념관 3.4%, 박물관 3.0%, 민속공원 6.4%, 팔도공원 4.9%, 세계공원 1.8%, 과학공원 4.2%, 청소년공원 9.6%, 체육공원 7.1%, 동물공원 2.6%, 식물공원 3.9%, 풍치공원 12.8%, 보존공원 3.1%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공원조성계획은 전반적으로 '용산기지 이전적지를 유보적인 오픈 스페이스로 남겨둠으로 후세에 현명한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조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조성의 기조가 공원조성 시에 어느 만큼 지켜질 것이며, 또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는 미지수이었다. 공원조성에 대한 이념, 주제, 그 구현 방식의 선정은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시행되었던 하향적 도시계획작성 방식을 답습한 상태에서 용산민족공원 조성방향에

대한 도식적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그같은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 측이 자발적으로 '용산기지'를 내놓게 되는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미온적이고 기술관료적으로 구상한 용산민족공원 조성은 시민들의 주체적인 의식과 참여를 통한 방식보다 서울시나 용산구청과 같은 공공당국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⁸⁾ 그래서 그런지 오픈 스페이스로 용산공원을 꾸민다는 초기의 방침과는 달리, 1996년 들어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서울시의 새로운 청사를 용산기지 이전지로 옮기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해체된 국립박물관도 이곳에 새롭게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모든 것은 용산기지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 비해 그 공간의 활용이 올바르지 않게 규정하고 있음을 뜻한다. 무엇보다 그 활용 전망은 민주화 시대 시민 주체성을 결여한 채, 권력기관인 관의 입장을 압도적으로 반영하였다.

5. 용산기지를 둘러싼 문제점의 재조명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용산기지는 장소가 지니는 이데올로기, 상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간 정치외교, 국방, 협약의 문제, 서울시란 대도시 공간에서 차지하는 입지상의 문제, 활용방안의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차제에 우리는 용산기지의 이같은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조명하면서, 미국과의 재협약을 시도하면서도 해결의 주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1) 민족주체성의 문제

용산기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세에 의한 민족적 주체성이 훼손된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물적 증거이다. 파행과 왜곡으로 점철된 5000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죽은 과거'에 대한 헛 칼질 보다 살아있는 과거의 모순을 자의식적으로 척결하면서 주체적인 미래설정을 모색하는 노력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정권을 잡은 일부 위정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기회주의적 슬로건'이 되어서

8. 1980년대 말에 일부 진보적인 도시전문가들은 용산기지 일대에 임대주택을 지어 민중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였지만 공감대의 폭이 그리 넓지 못했다(함인선, 1989).

는 안 된다. 용산기지의 문제는 미군과 관련된 군사상의 문제만이 아님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한다. 즉, 용산기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누적된 민족적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끼는 첫 단추이면서, 또한 21세기 지구화 시대 민족 주체성을 재정립해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상징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경제력이 세계 십 수위에 있으면서, 또한 우리 스스로 높은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면서, 이북과의 군사상의 대치란 이유로, 불평등과 종속의 상징인 미군기지를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혼란이며, 수치의 역사를 그토록 혐오하면서 그것을 후손에게 남기는 자기 모순이 된다.⁹⁾

2) 한미행정협정과 그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합의서의 문제

용산기지 이전을 어렵게 하는 가장 실질적인 요인은 1967년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SOFA)이다. 미국이 주둔하는 나라와 맺은 협정 중에서 특히 한국과 맺은 한미행정협정은 피주둔국의 주체성을 제약하는 요소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상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¹⁰⁾ 따라서 “한미행정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의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6, p.12). 특히 미군기지를 포함한 미군 공여지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그 사용권한이 일방적으로 미군 측에 넘겨져 있다. 넘겨진 기지나 공여지에 대해서 한국은 그 사용에 대한 감시·통제의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반환도 미군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런 면에서 용산기지 이전의 문제는 용산기지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한미간 불평등하게 맺어진 행정협정의 문제이며, 미군사령부가 있는 용산기지의 해결은 이 협정 전반의 재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

9. 미국에 대한 군사상의 종속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도심에 있는 미군사령부를 목격하면서 한국의 이 같은 종속성에 관한 심증을 굳힌다고 한다.

10.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양국의 행정부간에 맺어진 약식조약이다. 이 협정은 1953년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모범으로 하여 13여년간의 협상을 통해 1967년에 체결되었다. 미국은 협상체결의 한 조건으로 한국군의 월남파병, 한일협정 등을 관철시켰다. 이후 한미협정은 계속 논란이 되어 1988년에 개정협상이 시작되어 2여년만인 1991년에 개정되었지만, 기존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구조를 담고 있다. 더욱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분담금 지원을 개정협약에 담도록 하였다.

례가 될 수 있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를 좀해보더라도, 이전의 결정은 전적으로 미군 측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합의서부터 전면 재조정하여 본래의 합의대로 이전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전의 경비를 일방적으로 분담하는 조항은 전면 재조정하여 미국 측과 비용의 공평한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도시구조상의 문제

용산기지를 둘러싼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용산기지가 가지고 있는 서울 대도시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이다. 일본군이나 미군이 용산에 최초로 주둔하게 되는 시절(일제 초나 전쟁 후)까지만 해도 용산은 군사상의 요충지였을지 모르지만, 도시 공간구조상의 주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울의 덩치가 몇 십 배 커지는 가운데, 용산은 서울공간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서울의 내부구성 또한 복잡하게 됨으로서 이 중심부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지만, 용산기지의 성격은 서울의 대도시 공간 체계와 단절을 넘어 인접지역의 발전과 심대한 마찰을 빚고 있다. 용산기지는 이제 서울의 공간발전에 엄청난 제약조건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동작대교 북단이 용산기지 남쪽 끝에서 멈춘 모습에서 상징되듯이, 용산기지는 서울 대도시 중심부의 교통흐름과 토지이용의 연속성을 유기적으로 흐트려 놓고 있다. 서울 중심부에 한정된 토지자원은 도시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굉장히 소중한 조건이 되는 만큼, 용산기지의 입지적 중요성은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4) 용산기지 활용방안의 문제

용산기지 활용은 미국 측의 결정이 있어야만 그 매듭을 비로소 풀 수 있는 사안이며,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용산공원조성계획은 ‘김치국물만 미리 마신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 이적지에 관한 활용방안’은 용산기지를 미리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직간접으로 제시해 왔던 용산기지의 이용 방안은 여러모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엇보다 기지의 활용을 접근하는 시각이 장소의 중요성에 비해 의례적이고 기술관료적이란 점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민족적 주체성을 담아내면서 서울이란 대도시 공간에 걸맞은 공간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용산기지 이적지의 활용문제는 무엇보다 시민 중심적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통일시대와 세계화 시대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주체적 전망을 담아내는 시각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가 제시했던 민족공원조성 계획은 17개의 주체공원들로 쪼개 놓은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데, 이는 그 자체로서 용산기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계획이념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또한 계획안은 용산(특히 한강로)이 서울의 첨단정보화 및 국제화 중심지로 개발되도록 구상되었던 점을 고려하지 못한 '도상 개념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활용방안이 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때 서울시는 한때 시청사를 이곳에 입지 시키고자 했으며, 국립박물관도 결국 이쪽으로 입지시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중앙 집권시절의 하향적, 일방적 공간개발논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용산 이적지는 장기적으로 자본논리에 의해 개발되어 결국 상업화된 시설과 기능들로 들어차게 될 것으로 쉽게 예측될 수 있다.¹¹⁾

6. 용산기지의 이전과 활용을 위한 방안

용산기지의 순조로운 이전과 그 적절한 활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용산기지 문제는 민족 주체성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 수도의 건설이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용산기지 이전과 활용에 관한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을 생각해 본다.

1) 미군기지에 관한 조약의 전면적인 재조정

무엇보다 미군기지 공여에 관한 기존의 한미행정협정 전반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지금의 일방적이고 불평등하게 규정된 조건을 평등한 원칙과 조건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단지 용산기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군사협정과 관련된 한미간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면서 접근되어야 한다.

11. 용산 군이적지 활용에 관한 비공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상당한 부분은 '공원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택지와 주거지로의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서울시, 1992).

2) 용산기지 이전 일정의 확정과 비용의 공평한 분담

용산기지 이전 일정은 1991년에 협정된 조약에 따라 재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약에 담긴 불평등한 요소를 삭제하고 미군 측이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협상조건을 담아야 한다. 물론 추진 일정과 비용 분담은 양국 군사상의 관점, 그리고 서울의 공간문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실천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명백히 달아야 한다.

3) 이전 촉진을 위한 시민운동의 전개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현재 정부간 협상을 통해 추진되고 있지만, 용산기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시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접근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과 별도로 '용산기지 이전촉진을 위한 시민연대'의 결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전 촉진운동은 '민족 정체성 회복'과 같이 보다 큰 이상과 목표를 향한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한미간 협상 시에는 시민 대표의 참여가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

4) 이적지 활용에 관한 공론화와 '민주적' 활용

용산기지 이적지 활용에 관한 민주적 공론화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일반시민이 접근이 차단된 채, 폐쇄적인 틀 속에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선 안 된다. 이적지의 활용은 국가적 주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이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을 끌고루 수렴하는 시민합의 방식(예, 합의회의)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적지 활용에 관한 논의가 특정 권력계층, 조직,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아울러 이적지를 시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도 제동을 받아야 한다.

5) 개방공간으로 개발

이적지는 기본적으로 오픈 스페이스로 하여, 긴 시간을 통해 민족적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의 미래적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차 조성될 용산공원은 시설물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열려진 공간

으로 두어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용산의 개방공원은 자주, 민주, 미래, 통일과 같은 주제가 형성되고 경험되며 구현되는 '서울의 중심 주제공원'으로 성격이 부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산공원의 장소성 형성'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철저함이 있어야 한다.

6) 서울 대도시 순환성의 복원

용산 이적지는 서울 대도시 공간의 순환성을 매개하는 기능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용산 이적지가 감당해야 할 순환성의 복원은 용산기지를 중심으로 단절된 교통의 흐름을 살려내고, 나아가 생태·녹지축의 연결까지도 복원하는 것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용산 이적지를 통한 도시 순환성의 복원이 가지고 있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용산이란 개방공간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삶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예, 휴식공간을 통한 일상생활의 복원) 공간으로 조성되고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의 공간 흐름과 시민생활의 활동이 용산을 중심으로 순환되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용산에 대한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단지 내에는 내부에 다양한 하위의 생태순환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데¹²⁾, 이를 위한 시설은 가능한 지하화하거나 녹지시설과 결합하여 개발함으로써 인공시설이 주는 파행성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7)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현재의 용산기지는 주변의 토지이용과 단절되어 있다. 주변을 볼 때, 동쪽으로는 이태원이란 외국인이 주로 찾는 상업지역, 서쪽으로는 한강로, 남쪽으로는 서빙고동의 주거지와 한강, 북쪽으로는 후암동 일대의 주거지가 모두 각각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 이전 적지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용산의 오픈 스페이스의 성격 형성과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산전자상가와 한강로 일대를 첨단정보 및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고자 하는 구상

12. 이를 위해 현재 삼각지-이태원을 잇는 지하철 6호선이 건설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작대교 북단을 용산기지에 2개의 터널을 만들어 후암동까지 연결하는 계획도 있다.

을 하고 있으며, 이태원을 관광특구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의 중심역을 용산에 위치시킨다는 것도 서울시의 방침이다. 이같은 주변의 개발과 앞으로 조성될 용산 개방공간 간에는 경우에 따라 용도상의 불협화음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어 주변 상이한 공간기능과의 입체적인 연계를 설정하는 신중성을 가져야 한다.

8)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유보지 내지 보전지역으로 개발

용산공원은 장기적으로 서울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유지하는 중심거점으로 조성·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용산공원은 서울 공간 내에 현재 단절된 녹지 축을 다시 연결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구상되어야 한다. 용산 공원이 조성되면, 서울은 그린벨트로 둘러싸인 환상형 녹지 축, 동서를 가로지르는 한강 축, 그리고 남북을 잇는 녹지 축, 즉 북한산 국립공원-비원-창경궁-종묘-남산-용산-국립묘지-관악산을 연결하는 축이 형성되어, 명실상부한 녹색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9) 시민모금과 시민발의로 생태공원으로 조성

용산기지를 생태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공공당국이나 기술합리주의에 사로잡힌 도시계획가에 의해서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 미래 생태도시의 건설은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투자나 식재 등은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그 내용 구성도 시민발의를 통해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같은 미래지향적 도시공간 건설방식은 그 자체로서 민족적 주체성을 재인식하면서 실천하는 과정이 된다.

10) 용산기지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 실사실시

끝으로 이와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용산기지가 어떠한 토지이용 패턴을 가지고 있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주변지역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잠재적으로 어떠한 개발조건을 공유하고 있는지, 나아가 용산 일대의 사회경제적 여건까지도 종합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이 실사를 통해 이전촉진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활용대안의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검

토되고 추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사는 시민운동을 통한 용산기지의 반환과 시민 중심적 활용을 실천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본다. ■

■ 참고문헌

강홍빈, 1998, '신주작대로 기행', 한국도시연구편, 『한국도시론』, 서울 : 박영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서울 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 구상'.

서울특별시, 1991, '용산 군이적지 활용방안과 기본계획'.

용산구청, 1995, '용산구기본계획'.

조경진, 1995, '미완의 용산가족공원', 나리정책연구회편, 『웃을 갈아입는 아파트』, 서울: 열린세상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6,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함인선, 1989, '용산공원화와 신도시건설의 반민증성', 『사회와 사상』, 7월호.

용산기지 관련 한미행정협정 조항들

1. 기지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없다.

한미행정협정 제2조 1항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 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 협정은 본 협정 제 28조에 규정된 합동 위원회를 통하여 양 정부가 이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 (가) 항에 따라 양정부 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2.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 제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 2조에서는 어떠한 협의절차나 보상도 없이 1967년 이전 미군이 사용했던 모든 공여지에 대한 사용권을 소급 인정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1970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사유재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많은 민간 토지 및 재산이 국가 소유로 되었다.

3. 사용료 및 사용기한 문제

한미행정협정 제 5조 2항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제 2조 및 제 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은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비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6조

재산명칭	소재지	규모	관리청	추정시가	사용근거주장
주한미대사관 청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대지 : 2,001평 건평 : 2,986평	외무부	1,267억원	62년 USOM건물 신축계약
남영동 일반용역 사무실	용산 미군 기지 내	대지 : 6,212평	국방부	311억원	48년 최초 협정
용산기지내 대사관 직원숙소	용산 미군 기지 내	대지 71,029평	국방부		48년 최초 협정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실태 공개 문제

지금까지 소유권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공여된 사유지가 많다는 것이다. 헌법 제 23조의 '재산권 보호조항'에는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서 사유지를 징발하는 경우 적법한 법률에 근거하고 본인에게 알려 정당한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5. 국민생활 불편 및 도시발전 저해

미군기지가 대부분 도심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보니 그럴듯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도 미군측의 거부로 아예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 1) 공중에 뜬 서울시 신청사 건설계획
- 2) 용산 국립박물관은 지금, 불법 공사중
- 3) 미완의 다리, 동작대교

6. 반환상의 문제

한미행정협정 제 2조 3항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된다는 견지에서 동 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양해사항 제 2조 제 3항

- 1) 시설구역분과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목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주둔군지위협정 제 2조 하에 공여된 모든 시설과 구역을 검토한다.
- 2)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때든지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참고 :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

- 1) 이전대상은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 미8군 사령부 및 한미연합사 등 주요 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서울 북부 지역 미군부대의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용산의 사우스포스트 일부지역에 잔류하게 된다.

2) 기지 이전은 96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되 앞으로 주한미군 사령부의 규모 변화에 따라 일정 및 규모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3) 이전장소는 앞으로 연합작전 체제의 효율성을 포함, 다각적으로 검토될 것이며, 정확한 장소는 한미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4) 이전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고 미국측은 토지 소요를 최소화하고 건물 통합화 등을 추진해 비용 최소화해 적극 노력한다.

5) 용산 미8군 골프장은 현 남성대 지역에 건설중인 대체골프장을 미국측이 인수한 후 91년 3월 폐쇄하고 용산 골프장 내의 시설은 제거, 이전한 뒤 국방부측에 반환한다. ■

“용산 미군기지를 시민생태공원으로”

용산 미군기지는 남산공원의 1.2배, 서울대공원의 3배, 어린이공원의 6배,

서울 고궁을 다 합친 것이나 여의도 전체보다도 더 넓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뉴욕의 자랑인 센트럴 파크에 버금가고,

런던의 자랑인 하이드 파크의 2.4배에 이르는 넓은 땅입니다.

이제 용산 미군기지는 시민의 문화자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Action Now !!

- **항의 메일과 전화 보내기** 미 대사관, 미군 사령부, 미 국무성, 미 국방성, 외교부, 국방부, 문화부 등 관련 부서에 항의 메일과 전화를 보내 시민의 열망을 알립니다.
- **격려 메일과 전화 보내기** 용산구청은 최근에 용산 미군기지를 상대로 힘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용산구청에 시민의 힘과 의지를 전해 줍시다.
-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계인들에게 이 운동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 **회원 가입**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시민의 힘이 강력한 조직의 힘으로 결집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과 참여가 운동을 성공시키는 가장 튼튼한 기반입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 논의의 경과

·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의 한국내 비치 권리를 한국이 미국에 대여함.

· **1988년** 6공화국 출범 직후, 뒤틀린 한미관계를 바로잡는다는 기치 아래 용산 미군기지와 미 대사관 이전계획 공표, 6공화국의 역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전협상 추진.

· **1989년** 서울시, 전체 용산부지를 민족공원화한다는 계획 발표.

· **1989년 8월** 용산동 1가의 육군본부가 대전으로 이전.

· **1990년 2월** 한미 양국 이전에 대해 합의.

· **1990년 6월** 한미 양국 미8군기지(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 교환. '이전 비용을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되 토지 소요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하기로 한다는 수준의 합의. 1996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체결 조항과는 달리 미국을 강제할 근거조항이 전무함. 그후 관련부서인 외무부, 서울시와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1990년 7월** 서울시와 미국, 대사관저를 경기여고 터로 옮긴다는 데 따른 재산교환각서 체결. 여기서도 이전 시기를 못박는 데 대해 미국측이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여, 이전시기 및 내용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권한사항으로 남음.

· **1991년 7월** 기지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 원칙 합의안 발표. 이전비용 17억 달러 산정.

· **1991년 9월** 미군기지 내 미 대사관 용도의 8만평 제외해 달라고 주장. 이전 비용 100억 달러 주장. 민자당 발표 이전비용 추정액 2조 4천억원(30억 달러).

· **1992년 4월** 주한미군 당국, 이전계획 기간을 2000년으로 연기하자고 주장.

· **1992년 11월** 용산가족공원 개장. 1959년 이래 미군 골프장으로 사용하던 9만평의 공간을 돌려 받아 국방부가 8만평, 서울시가 1만평을 관리함.

- 1993년 4월 김영삼 정권 수립 현재 용산미군기지를 포함하여 전국 19개 군부대시설의 교외 이전사업을 추진중.
- 1993년 5월 국방부, 자체적으로 용산기지 이전방안 재검토 용산기지, 미 대사관 이전 사실상 백지화됨.
- 1993년 6월 국방부, 오산기지 주변 터 매입을 취소 용산기지 이전이 2000년 이후로 사실상 연기됨. 청와대도 국방부 보고에 동의함.
- 1993년 8월 이전계획 취소, 청와대와 국방부 동의. 외부부는 논의과정에서 소외됨.
- 1994년 북한 핵문제 논의의 와중에서 이전문제 사실상 백지화됨.
- 1996년 7월 전국연합 등의 주최로 용산미군기지 반환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 2000년 현재 용산구청, 미군 측의 '불법적인' 호텔 증개축 및 각종 과태료상습체납을 실효행사로 저지할 의사 천명. 용산구청의 노력에 힘입어 관련 자치단체들간의 연대 추진. 문화연대의 발의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및 시민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국민운동' 발족. ■

“ 시민 여러분들께 문화연대가 제안합니다 !! ”

● **전문가 워크샵** 4월부터 7월까지 매달 마지막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전문가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워크샵의 결과는 매달 자료집의 형태로 발표될 것입니다.

● **시민제안 공모** 이 운동에 관한 시민의 제안을 연중 공모합니다. 다양한 시민의 제안이야말로 이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이 될 것입니다.

● **시민문화마당**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과 시민생태공원의 조성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 **전시회** 사진, 지도, 설계도 등의 각종 시각자료들을 통해 용산의 공간적 의미를 짚어 보는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열겠습니다. 시민생태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천만인 서명운동** 시민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부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